

제2회 일본 진단 세미나

- ◆ 주제: 민주당 대표선, 자민당 총재선 이후의 일본 정국
- ◆ 일시: 2012년 9월 28일 (금요일) 15:00-17:00
- ◆ 장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GL Room
- ◆ 발표: 하코다 데쓰야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

■ 발표 내용

안녕하십니까. 아사히신문의 하코다 데쓰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본의 정국이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솔직히 저도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의원 해산 여부라든가 양당의 인사, 그리고 노다 총리의 경우는 개각 문제도 있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준비한 대로 사실관계를 설명드리고 여러 가지 전망 등을 이야기한 뒤, 여러분의 질문을 받고 제가 답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21일에 민주당 대표선, 26일에 자민당 총재선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는 4명의 후보 중에 노다 총리가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노다 총리는 민주당이 집권한 뒤 하토야마 유키오, 간 나오토에 이은 세 번째 총리대신입니다. 노다 총리는 정치가로서는 지명도나 인지도가 낮은 편이며, 미디어 업계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수수한 인물입니다. 한국 언론은 노다 총리를 상당히 우경화된 지도자로 묘사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면도 있으며 마츠시타 정경숙(松下政經塾) 출신다운 사고방식을 가진 정치가입니다. 본인 스스로는 그다지 스마트하지는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땀흘려 열심히 일하는 타입이라고 공언해 왔습니다.

아마 노다가 총리대신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많지 않았겠지만, 관료들에게는 노다 총리의 인기가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경제 부문의 권한을 가지는 재무성, 경제산업성, 그리고 외무성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대표선에서 압승을 거두기는 했지만, 일본 내에서 노다 총리의 인기는 매우 낮습니다. 민주당 합동연설회에서도 상당한 야유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민주당 내에서는 그나마 지지율이 높아서 노다 총리가 당선되었고, 자민당도 이와 비슷하게 인기는 별로 없지만 아베 전 총리가 총재에 당선되었습니다.

한국에도 내우외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일본은 이 이상의 내우외환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인한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김성환 장관과 일본의 겐바 외무장관 회담이 있었는데, 다른 분야에서는 협력 의지를 확인했습니다만 영토 문제에서만 양국의 입장이 평행선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있는데, 일본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의지가 없지는 않습

니다만 좀처럼 진전이 되지 못하는 가운데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강행되어 지금 이렇게 한일관계가 표류할 지경이 된 것 같습니다. 8월 10일 독도 방문과 14일의 천황 발언이 나온 직후의 흥분 상태와 비교하면, 분명 현재 일본에서는 절반 또는 그 이하로 사태가 진정되었습니다. 다만 일본 내에 우익이라기보다는 '조금 단순하고 내향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간단히 좌파·우파를 구분할 수는 없지만, 내향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 존재하고 있고 또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국과의 갈등이 좀 진정되나 했더니, 이번에는 또 중국과 센카쿠 문제가 터졌습니다. 최근 언론계에서는 센카쿠 이상의 이슈가 없다고 할 정도로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일촉즉발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사태가 진정되기는커녕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중국의 함대나 함선이 일본이 주장하는 영해 내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만약 포성이 울리는 날에는 정말로 국면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외무성 장관이든 국장이든 국방장관이든 일본을 방문하면, 센카쿠 주변은 미일안보조약 적용 범위이며 유사시 미군 개입이 불가피함을 빈번히 역설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작은 섬을 둘러싸고 동맹국 일본과 중국 간에 문제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이 개입하는 상황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다는, 그런 억지의 메시지를 필사적으로 중국에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센카쿠 문제의 발단은 도쿄의 이시하라 도지사가 매입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한 모금액은 이미 10억 엔을 훨씬 넘었습니다. 본래 센카쿠를 국가 차원에서 매입하게 된 것은, 도쿄도가 정말 매입을 해서 센카쿠에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일본 국기를 걸거나 하는 사태는 피해야 한다는 취지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일본 외교의 오산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독도 케이스와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은 센카쿠를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었던 사실 자체를 몰랐는데, 어느날 갑자기 일본이 국유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한 반발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이런 반일감정이 이용된 면은 있습니다만, 소위 대규모 반일시위가 중국에서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사태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 파급되어 버렸고, 중일국교정상화 40주년 행사도 사실상 중지되었습니다. 대개의 정치 현안은 어느 정도면 수습 국면으로 가겠다는 예상이 가능하지만, 이 센카쿠 문제는 정말 어디까지 갈지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염려와 불안이 큼니다.

한편 미국과의 관계도 그리 원만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수송기 '오스프레이'가 아마 오키나와에 배치될 가능성이 큰데, 그 장소가 바로 오키나와의 정중앙에 자리잡은 후텐마 비행장입니다. 이 후텐마 주변은 도시 중심가를 이루고 있어서 병원이나 초등학교 등이 많습니다. 거기에 미군 해병대의 수송기가 출입하면 소음이 엄청납니다. 이전 하시모토 정권에서 이 비행장의 반환을 미국과 합의했지만, 미국에서는 오키나와 현내에 다른 기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오키나와에서는 여기에 반대했습니다.

후텐마 비행장에 오스프레이가 배치되었을 때의 문제는, 엄청난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추락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벌써 구형 헬리콥터 제조를 중단했기 때문

에 해병대 기지가 존속하는 한 이 오스프레이를 반드시 배치해야 합니다. 오스프레이가 정말로 후텐마 주변에 추락하게 되면 지금까지 없던 미군기지 반대운동이 펼쳐질 것이고, 아마 일본 전역에도 상당히 퍼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지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키나와가 독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히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노다 정권으로서도 이 문제에 상당히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TPP 문제입니다. 원래 노다 총리는 TPP 협상을 추진하고 싶어했지만, 민주당 내에 신중론이 강했습니다. 최근에는 정국이 복잡하게 돌아가다 보니, 노다 총리가 TPP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 총리 개인 또는 총리를 지지하는 재무성의 관심이 적어져서 그런 듯 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재무성의 우선적인 관심사는 소비세 인상이나 사회보장제도의 정비이기 때문입니다.

외환(外患) 못지않게 내우(內憂)도 많습니다. 일본은 경제대국이라기보다는 GDP의 2배인 1천조 엔 규모의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는 '부채대국'입니다. 물론 이 대부분을 국민이 국채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심각하지 않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수입보다 적자국채로 불리는 부채가 많은 구조 속에서, 50여 %의 국채를 발행하여 예산을 마련하려면 '특례공채법안'을 통과시켜야만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10월 이후의 예산이 안 나올지도 모를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 문제는 마치 자민당이 민주당의 인질을 잡고 있는 것과 같은 형국입니다. 여당으로서는 빨리 이 특례공채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어하지만, 야당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조속히 중의원을 해산하라고 요구하는 밀고 당기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노다 총리는 선거제도 개혁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선거구별로 1표의 격차를 2배 이하로 시정하라는 판결이 나온 뒤로, 선거제도 개혁 없이 현재 상태로 해산하면 위헌 상태가 됩니다. 자민당은 '0증 5감', 즉 의석 수를 5석 줄이는 것만으로도 우선 1표의 격차가 줄어든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노다 총리는 소비세 증세를 통해 국민들의 부담이 늘었으니 국회 의석도 비례 중심으로 줄이지 않으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례는 군소정당이 원내에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비례의석을 줄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다음 선거에서는 아마 에너지 대책이 큰 쟁점이 될 것입니다. 2011년의 동일본대진재 이후 일본 국민들의 대다수는 원전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생활이 다소 불편해지더라도 원자력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자는 의견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 간 정권은 원전 폐기에 열심이었지만, 노다 총리는 본심으로는 원전을 조금 남겨두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초로 토론형 여론조사를 도입하는 등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해 보아도, 국민의 다수는 생활의 불편이나 경제 부담에도 불구하고 원전 폐기를 지지합니다. 결국 노다 정권은 2030년대까지 모든 원전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불과 4일 후에 각료회의에서 이 원전폐기에 관한 의결이 보류되었습니다. 이 4일 동안 재계의 반대와, 미국의 반대에 부딪친 것입니다. 지금은 원전을 정말 완전히 폐기할지 여부가 애매해진 상태입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민주당 대표선 합동연설회에서 노다 총리에게 야유를 보낸 사람의 다수는 에너지 문제에 대한 실망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도 매주 금요일 밤 총리 관저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끊임없이 원전 반대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만약 정권교체로 자민당이 정권을 잡으면, 이 문제는 다시 불안요소가 될 것입니다. 좌익뿐만 아니라 지지정당을 막론하고 아까 언급한 '내향적이고 약간 단순한' 사람들 중에서도, 한국이나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하면서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원전 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다같이 협력하기 때문에 이런 원전 반대 시위가 끊임없이 지속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자민당의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9월 26일 자민당의 총재선에서, 가능성이 낮아 보였던 아베 전 총리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아마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슈가 불거진 이후, 유약하게 보여지던 아베 전 총리가 급부상하고 아소 등 구 정치세력들이 갑자기 지지세력으로서 결집한 결과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당초 아베는 출마를 주저했다고 합니다. 이전 총리를 역임하고 재집권을 노린 사람은 하시모토 전 총리뿐인데, 예상을 뒤엎고 고이즈미가 압승을 거두는 바람에 총재선에서 패한 하시모토의 정치생명은 사실상 끝났었습니다. 이 선례를 보고 아베 측근들은 출마를 말렸다고 하는데, 결국은 후보로 나왔습니다. 일본에는 '정치의 한발 앞은 어둠'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언론에서 이시하라, 이시바, 아베 순으로 득표할 것으로 전망하고, 아베는 주요 각료로서 이시바 내각을 지탱해 나갈 생각으로 출마하지 않았을까 하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일반 당원, 지지자들에게는 이시바가 인기가 많았지만, 국회의원들만 참여하는 2차 결선투표에서는 아베가 역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신문사마다 아베 당선을 보는 시각은 다르지만, 아베가 이끄는 자민당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총재선에서 아베가 언급했던 5년 전 퇴진 때의 '미완의 과제'라는 것들이 대부분 한국 분들의 분노를 살 만한 것들입니다. 본인이 총리로 재임하는 기간 중에 야스쿠니를 참배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발언했고, 위안부 동원에 군의 관여를 사죄한 1993년 고노 담화에 대해서는 재임 중에는 '당연히 답습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는 '재검토해서 새로운 담화를 내놓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고노 담화뿐만 아니라 무라야마 담화에 담긴 사죄의 정신까지 재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아무리 아베라도 무라야마 담화를 반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보면 아베 집권기의 내각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소위 '친구 내각'이라고 해서 당선 횡수나 능력과 상관 없이 친분에 따라 장관을 임명하는 바람에 내각의 전체적인 기강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리고 아베에게 가장 굴욕적인 사건은 아마 부시에게 위안부 문제를 사죄한 것이겠지요. 일본군의 직접적인 관여에 의한 위안부 강제 동원이 없었다는 일본측 주장에 대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강하게 비판했었는데, 아베는 '광의의 강제'와 '협의의 강제'를 구별하고 미국이 비판한 것은 '광의의 강제'이지만 일본측이 주장하는 '강제'는 '협의의 강제였다'는 억지 논리를 폈습니다. 그 후 일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되어, 결국 아베는 사죄를 했습니다. 이런 굴욕뿐만 아니라 참의원 선거 참패, 인도양 자위대 파견관련 법안 표류 등의 문제가 겹쳤을

때, 아베는 건강 문제로 사임했습니다. 이제는 건강이 회복되었다며 아베는 총재선에 출마했고 당선되었습니다.

지난 6월 3당 합의에서, 자민당의 다니가키 당시 총재와 공명당 야마구치 대표가 노다 총리와 함께 '사회보장(연금)과 세제의 일체 개혁'을 논의했습니다. 여, 야당을 막론하고 이 문제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개혁안에는 일단 합의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국회 해산을하기로 했습니다. 이 3당 합의를 새 자민당 총재가 지킬 것인가의 여부가 또 하나의 큰 초점입니다. 아베 총재는 3당 합의를 중시한다고는 하지만, 조속히 중의원을 해산하자고 합니다. 한편 노다 총리는 3당 합의는 다니가키-야마구치-노다간 합의였다고 주장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해산'이 '머지않아 해산' 등으로 점점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또한 각 당의 인사가 안정되면 당수간 회담을 통해 3당 합의를 '재확인'하자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 정치는 민주당, 자민당 만으로는 이야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유신회를 이끄는 하시모토의 존재 때문입니다. 일본유신회는 간사이 지방 중심으로 많은 지지를 모으고 있으며, 최근 정당으로서 정식으로 발족했고 중의원 선거에 전국 350명의 후보를 낸다며 인선작업 중입니다. 이 하시모토와 아베는 상당히 가까운 사이이고, 유신회 간사장인 마쓰이도 '아베와 가치관이 맞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민당과 유신회의 연대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자민당 총재선을 다음 총리 선출의 전초전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선거는 생사를 건 싸움입니다. 이 의석을 두고 그렇게 쉽게 연대가 가능할지 의문일뿐더러, 하시모토 지지층 중에 자민당과의 연대를 원치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유신회가 정당으로서 발족하기 위해 자민당과 민주당에서 탈당한 현역 의원들을 영입했는데, 이 인사들의 인기가 낮을 뿐만 아니라 침몰 직전의 배를 탈출하려는 사람들일 뿐 정말로 유신회와 가치관이 맞아서 입당했다고 보기는 힘든 인사들이었습니다. 유권자들도 이런 점을 간파하고 하시모토 외 인사들에 대해 상당히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신회의 돌풍도 최근 그 기세가 좀 주춤한 듯 합니다. 또한 유신회 입당을 위한 민주당 탈당행렬이 끊이지 않지만, 유신회 측에서 입당을 거절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산에 관한 전망을 해 보겠습니다. 노다 총리가 '가까운 시일 내에', '머지 않아', '서로 논의하자'고 말을 바꾸는 것을 보아도, 3당 합의를 깨서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고 최대한 시간을 끌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중의원 의석수는 2009년 8월 역사적인 정권 교체 때의 308석에서, 오자와가 탈당하여 '국민의 생활이 제일'이라는 신당을 창당한 후 245석으로 줄어 버렸습니다. 중의원 과반수 사수를 위해 5석을 지켜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실 3당 합의에 의해 '가까운 시일 내에' 중의원을 해산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지난 정기국회에서 내각불신임안이 부결되고 일단 노다 정권의 생명이 연장된 채 회기가 끝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는 동일한 내각불신임안을 다시 낼 수 없었지만, 10월 임시국회는 또 다른 스테이지라서 만약 누군가가 불신임안을 내서 찬성자가 많으면 바로 노다 총리가 사임하든지 해산해야 합니

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아슬아슬한 위기입니다. 남은 245명의 의원 중에도 사실은 TPP나 원자력발전소 문제 등에 불만을 가진 의원들이 배신하거나 탈당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노다 총리는 대표선 당선 직후 고시이시 현 간사장에게 유임을 부탁했는데, 이 고시이시 간사장의 지론은 '당내 융화'입니다.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은 사실 하루라도 더 의원직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승부의 시기를 서둘러 맞이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고시이시 간사장을 당선 직후 서둘러 유임시키는 것을 보면, 노다 총리가 해산 문제에 대해 고시이시 간사장의 의중대로 나갈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베가 자민당 총재에 당선되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도 여러 번 확인되었듯이 국민에게는 이시바의 인기가 많았지만, 당의 논리로 아베가 선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베는 민의를 대표하지 못한다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일본에서는 주말 동안 대부분의 언론사가 일제히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민주당, 자민당의 당수 선거를 치른 다음 그 결과를 일반 유권자가 어떻게 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수로 선출된 직후에는 컨벤션 효과로 지지율이 오르게 마련입니다만, 최근에는 센카쿠 문제가 미디어의 톱뉴스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일본에서는 영토 분쟁 소식은 이제 지긋지긋하다는 반응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베가 주장하는 '강한 일본' 논리가 얼마나 먹힐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아베 총재의 지지도가 예상보다 오르지 않을 경우, 노다 총리가 승부수를 띄울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아베 인기가 침체되어 있는 틈을 타서 10월이나 11월쯤 선거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베는 이전 위안부 발언에서 보듯이, 시간이 지나면 실언이나 망언을 할 수도 있으니 조금 더 기다리면 민주당이 더 유리해질 거라고 보는 사람도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산 시점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주말의 여론조사를 주목해 볼만 합니다.

민주당의 탈당 행렬이 끊이지 않는다면, 민주당도 해산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례공채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되는데 불신임 추진 움직임이 강해지면, 임시국회 개회 시기 자체를 늦추어서 의원들을 한번 더 설득해서 탈당을 막을 시간을 갖고 임시국회를 열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과의 센카쿠 문제가 더 악화되면 마치 대진재 때의 간 정권처럼, 국난을 맞은 가운데 정국이나 선거가 최우선 과제는 아니라는 명목으로 현 정권의 연명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참의원에서 노다를 비판한 것을 이유로 들어 '3당 합의는 자민당이 어긴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자민당 탓에 예산이 지출되지 못해서 급여가 나오지 않고 공공공사가 중지된다는 비판이 나오면, 자민당 지도부는 눈앞의 해산도 중요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례공채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1월이나 늦어도 4월이 될 것입니다. 다만 중의원 해산이 더 미뤄져서 7월이 되면 참의원 선거와 동시에 중의원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여기에는 공명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명당은 앞으로도 중립을 지키면서 민주, 자민 양당과 대립하지 않고 연대를 지속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 또한 앞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토론

Q1) 현재 중국이 센카쿠의 국유화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가정이기는 합시다만 만약 당초 이시하라 도지사의 계획대로 도쿄도가 센카쿠를 매입했다라면 지금 상황과는 어떻게 달랐을지 궁금합니다.

A1)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선 도쿄도가 센카쿠를 매입하려고 한 것이 정말로 국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의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번처럼 격렬한 중국의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도 문제입니다만, 국유화 이외의 다른 선택지는 정말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온 원인은 통솔력의 부족이라고 봅니다. 개인 명의에서 국가 명의로만 바꾼 것이라고 아무리 일본이 주장해도, 중국은 납득하지 않으니까요. 다만 이시하라 도지사는 국유화로 인해 일본의 권리가 더욱 분명하게 어필될 것이라고 미리 계산하고 도쿄도 차원의 매입을 추진했을 것입니다.

Q2) 2030년대까지는 원전 폐기를 목표로 한다던 계획이 재계의 견제나 미국의 반대에 직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미국의 반대에는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좀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10월에 중의원이 해산되지 않은 채 한국에서 새 정권이 탄생할 경우, 일본에 제안하면 좋을 것 같은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중과 영토 문제에 묻혀 있는 북일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올해는 북일 평양선언 10주년이기도 하고, 4년 만에 정부 레벨의 대화가 재개되기도 했는데, 북일관계에 대한 일본유신회 하시모토의 관점이 궁금합니다.

A2) 미국의 반대를 간단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원자로 자체의 기술이나 부품은 제너럴일렉트릭(GE) 제품이 많다고 합니다. 일본처럼 51기나 원전이 있는 나라는 흔치 않기 때문에, 일본의 원전 폐기는 미국에 상업적으로 큰 손해가 됩니다. 또한 안보상으로 미일동맹에서 일본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크게 중시되는 존재이기에, 미일간에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완전히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원전을 다 폐기해 버리면, 일본의 경제적 위상이 타격을 받을 것이고 파트너로서의 자격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 역시 원전대국입니다만, 국민성 측면에서 보아도 생활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원전을 폐기한다는 것은 미국인에게 있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원전 폐기는 미국측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한일간에 역사인식을 중심으로 한 문제가 많지만 한일이 협상을 못할 이유가 없고 일정 정도의 의지도 있기 때문에, 북한에 햇볕정책을 폈듯이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제스처를 보내면 일본의 지도부나 '약간 단순하고 내향적인 사람들'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ch의 반응을 봐도 네티즌 중에 중국의 반일시위를 보고 한국을 긍정적으로 재평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다음 정권이 들어서고 나면 한일 양국이 상대방

에게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훈풍을 불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북일관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본은 9월 17일의 북일 평양선언 10주년 기념일까지 국장급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북한 측의 스타트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당수 선거를 다 치를 때까지, 일본측의 각오를 보기 위해 일본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북한이 회담을 분명히 재개할 것으로 믿고 기다렸지만, 북한이 계속 회담을 연기하면서 대화의 주도권이 이제는 완전히 북한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전 총리로 재임하던 시기에 전임 고이즈미에 비해 아베는 북한에 적극적으로 접근했었기 때문에, 만약 아베가 다시 한번 총리로 집권한다면 한국, 중국과의 관계는 걱정되지만 북일관계는 개선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Q3) 아까 민주당에서의 탈당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다른 선택지가 없다면 탈당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본 내에서 민주당에 대한 평판이 그 정도까지 나쁜지, 그리고 앞으로도 탈당 움직임이 지속될지, 민주당의 미래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A3)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떨어진 이유는 약속한 것은 안 지키고, 약속하지 않은 것을 추진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토야마, 간 정권까지는 민주당으로서의 이념이 남아있었고, 정치가들이 주도해서 국민의 생활을 중시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정책을 비교적 쉽게 추진했습니다. 반면 노다 정권은 정치 주도에서 관료 주도로 돌아섰기 때문에 재무성, 경제산업성, 외무성 등에서 평가가 좋지만, 관료들에게 아무리 평가가 좋아도 일반 국민에게는 평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탈당 움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자민당이나 기타 세력으로 정권교체가 되면 민주당은 분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유신회로 입당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겠지요.

Q4) 일본유신회가 350명의 의원 후보를 낼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다음달 또는 다다음달에 해산이 이루어질 경우 이 규모의 후보를 내는 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후보의 전국 분포나 기성 정당과의 1:1 대결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A4) 유신회는 분명 빠르면 11월 선거 시점까지 어느 정도 규모의 후보들을 낼 것이고, 실제로 현재 인선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만 하시모토는 상당히 엄격한 면이 있어서, 파벌 등 기존의 일본 정치를 결정해 온 요소들을 타파하려고 합니다. 노다 정권이 선거를 미루려는 이유 중의 하나도, 유신회가 자금 부족 등으로 자멸하기를 기다리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다만 오사카유신회의 경우는 명목상 유신회라는 같은 명칭을 쓰지만, 행태는 상당히 저급한 '옥석혼효(玉石混淆)'의 집단이기 때문에 막상 정치 일선에 뛰어들면 하시모토 이외의 인사들에게서는 여러 가지 스캔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Q5) 고이즈미 총재가 추진한 정책 중에서 우정민영화 등이 결과적으로 자민당이 붕괴하는 데 상

당한 역할을 했는데, 일본유신회의 하시모토는 어떤 경제정책을 표방하고 있는지요. 간사이 지역에서 다양한 포퓰리즘적 정책을 펴서 아마 고이즈미와 닮은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는 기세를 올릴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지지층을 굳히는 데는 한계가 있을 듯 합니다.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요.

A5) 하시모토가 주장하는 바의 요지는, 메이지 유신 때처럼 발상이나 상식 자체를 바꿔서 거버넌스 면에서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와 동급으로 격상시키는 것입니다. 소비세를 지방세로 돌리고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며, 광역지자체를 만들어 그 장에게 재원을 맡겨서 '합중국'과 같은 일본을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북일관계에 대해서도 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별로 좌우에 경도되지 않지만, 여론이나 정치의 흐름에는 대단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포퓰리스트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하시모토가 제기한 원전 문제나 독도 공동관리론은 종래 우익의 행태와는 동떨어진 논리입니다.

Q6) 한국에서 2년 정도 거주하면서 최근 일본의 보도 행태에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일관계가 냉각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내향적이고 약간 단순한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급증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는 일본과 일본인을 분리해 생각하고 호의적으로 보아주는 한국인들이 많지만, 일본 미디어의 보도만 접하는 일본인들은 한국인이 공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일본 내에서 반한감정이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한국 현지에서 느끼는 한국인의 반응과 일본인이 접하는 한국인의 반응간의 온도차가 큰데, 언론계 현직에 종사하는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6) 일본의 미디어가 한국의 표면적, 정치적인 움직임만 보도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현재 한국의 진짜 생활이나 여론을 거의 보도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단계에서는 일반 기사가 아닌 칼럼 등에서만 한국의 현실을 소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미디어가 거의 똑같은 화면으로 단편적인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위험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시정하기 위해 저도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